농림축산식품부	# 설명자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2021년 12월 22일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농산업정책과 최명철 과장(044-201-2411), 이창형 사무관(2423) / 제공일 : 12월 22일 (총 2매)		

걱정 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을 위해 '22년 예산 158억원 지원

[문화일보 12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]

○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농 육성, 데이터 수집 등 농업분야 공공적 성격,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육성 등의 목적을 감안, '22년 예산으로 158억원(개소당 39.5억원)을 국비 지원

○ 12월 21일 문화일보 **<정부-지자체 '스마트팜 혁신밸리' 운영비 놓고 갈등>** 보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언론 보도내용

□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지만, 정부-지자체 '스마트팜 혁신밸리' 운영비 놓고 갈등

○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비에 대해 상주, 김제 등 4개 자자체가 국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, 농식품부는 '지자체 소유하고 운영하는 시설의 운영비는 지방비 부담이 원칙'이라며 입장차

농림축산식품부 입장

□ 우리부는 「스마트팜 확산방안('18.4월, 관계부처 합동)」에 따라 스마트농업 인력·기술의 확산 거점으로 「스마트팜 혁신밸리*」를 2022년까지 전국 4개소에 조성하고 있습니다.

* 스마트팜에 특화된 청년창업 보육, 스마트팜 임대, 기자재 실증을 핵심 기능으로 조성

○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 보육센터(평균 2ha/개소), 청년농에게 임대하는 임대형 스마트팜(6ha), 스마트팜 기업·연구기관의 실증공간을 제공하는 스마트팜 실증단지(2ha)와 지원센터(빅데이터 센터 포함)로 구성됩니다.

□ 우리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청년농 육성, 데이터 수집 등 농업분야 공공적 성격,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육성 등의 목적을 고려하여, '22년 예산으로 158억원(개소당 39.5억원)을 국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재정당국과 협의결과, 조직 운영을 위한 일반관리비 등의 순수 운영비 성격은 국비 지원 제외

○ 청년창업 보육센터는 청년농 육성을 위한 공간이므로 국비 100%로 교육비, 사업운영비 등 80억원(국비 100%, 개소당 20억원)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.

○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대해서는 스마트팜 기자재 산업 육성 등을 위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역할을 고려하여 66억원을 지원합니다.

* 전문 실증서비스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사업비 26억원(국비 50%, 개소당 6.6억원), 기업의 실증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기업 실증비용 지원 40억원(국비 50%, 개소당 10억원)

○ 국내 스마트농업 데이터의 활용 기반 구축을 위해 혁신밸리 빅데이터 센터의 데이터 수집·활용을 위한 사업비(위탁사업비)도 국비 12억원 (개소당 3억원)을 지원할 예정입니다.

□ 향후 우리부는 '21.11.29일 준공한 전북 김제와 '21.12.15일 준공한 경북 상주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운영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,

○ 스마트팜 혁신밸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은 계속 발굴하여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.